재정주권시민행동

CITIZENS' ACTION FOR FISCAL SOVEREIGNTY | 내 돈은 내 권리다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배포 일시	2026. 11. 18.(수)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문의	재정주권시민행동 사무국 010-2650-1204	이메일	our.budget.right@gmail.com
홈페이지	taxwatch.kr	분량	본문 2쪽 · 붙임 1건(성명서 전문)

성명 발표 | 지방재정 투명성

내 세금으로 짠 내년 살림, 주민만 못 본다

재정주권시민행동 "2027년 예산안·사업설명서, 의회 제출과 동시에 주민에게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는 최대 20일… 답 받을 때면 심의 이미 끝나

지자체장·지방의회·행정안전부에 요구… 지역별 공개 실태 확인해 발표 예정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짠 내년 지역 살림을 정작 주민은 볼 수 없다. 시민 재정감시단체 재정주권시민행동은 18일 성명을 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도 예산안과 부속서류 전부를 의회 제출과 동시에 주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도 예산안은 이미 제출됐고, 시·군·자치구 예산안은 오는 21일까지 제출된다. 지방의회는 12월 중·하순 이를 의결한다. 내년 한 해 지역 살림이 앞으로 한 달 안에 정해지는 셈이다.

재정주권시민행동은 "예산안을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드물고, 공개하더라도 개요만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업별 설명서와 부속서류는 의회에 전달되지만 주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청구뿐인데, 결정 기한이 10일이고 연장되면 20일이어서 답을 받을 즈음이면 심의는 이미 끝나 있다.

사업설명서에는 사업 목적과 산출근거, 전년도 집행 실적,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담긴다. 단체는 "주민은 이 서류가 있어야 왜 지금 이 사업에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는 예산이 확정된 뒤에야 이뤄진다. 2027년 예산 공시는 내년 2월 말에 나온다. 심의 중인 예산안을 주민에게 공개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단체는 "그렇다고 공개를 막는 규정도 없다.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하는 순간 이미 공적 문서"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예산집행 내용처럼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는 공개 범위와 시기를 미리 정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그 밖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제출과 동시에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재정주권시민행동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2027년도 예산안과 부속서류 전부를 의회 제출과 동시에 누리집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개 범위에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반드시 넣고, 그림 파일이나 인쇄본이 아니라 검색되는 문서와 엑셀처럼 주민이 내려받아 분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내놓으라고 했다. 지방의회에는 제출받은 예산안과 부속서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과 검토보고서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계수조정을 포함한 심사 과정을 회의록으로 남겨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에는 확정 뒤 공시만 정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예산안 단계의 공개 의무와 표준 공개 양식을 추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각 지역의 예산안 공개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발표하고, 공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보공개 청구와 공개 질의로 대응할 계획이다. 재정주권시민행동은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일요일 「2027년 지방재정 분석 워크숍」을 열어 여러 지역 참가자들과 함께 지역 예산안을 분석하고 있다.

재정주권시민행동은 "예산은 단체장의 돈도, 의회의 돈도 아니다. 주민이 낸 세금이고 주민의 삶에 쓰일 돈"이라는 말로 성명을 맺었다.

참고 | 관계 법령 요지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내야 한다. 지방의회는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10일 전까지 의결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결산 등 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예산이 확정된 뒤에 이뤄지며, 심의 중인 예산안을 공개하라는 규정은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공기관은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 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정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그 밖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붙임 성명서 전문 1부. 끝.

재정주권시민행동은
"내 돈은 내 권리다"라는 선언으로 2025년 10월 시작한 시민단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예산과 결산을 시민이 직접 들여다보고 편성·심의·집행·결산 전 과정을 감시하고 참여하는 일을 합니다.

홈페이지 taxwatch.kr · 문의 사무국 010-2650-1204 · our.budget.right@gmail.com

지방정부는 2027년 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27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내야 한다. 지방의회는 12월 중·하순까지 이를 의결하게 된다.

내년 한 해 우리 지역 살림이 앞으로 한 달 안에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의 주인인 주민은 지방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안을 공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공개하더라도 예산안 개요만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별 설명서와 부속서류가 의회에 전달되지만 주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주민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청구밖에 없다. 하지만 결정 기한만 10일, 연장되면 20일이다. 답을 받을 때쯤이면 심의는 이미 끝나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예산이 확정된 뒤 2개월 안에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정이 끝난 뒤에 알려 주는 구조다. 심의 중인 예산안을 주민에게 공개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공개를 막는 규정도 없다.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하는 순간 이미 공적 문서이고,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는 정보다.

사업설명서에는 사업의 목적, 산출근거, 전년도 집행 실적,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주민은 이 서류가 있어야 왜 지금 이 사업에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물을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제출과 동시에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일 뿐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가 없어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행정안전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지방자치단체장은 2027년도 예산안과 부속서류 전부를 의회 제출과 동시에 누리집에 공개하라.
2. 공개 범위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반드시 포함하라. 총괄표와 보도자료만으로는 주민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3. 주민이 내려받아 분석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공개하라. 그림 파일이나 인쇄본 열람이 아니라 검색이 되는 문서와 엑셀 등 가공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4. 지방의회는 제출받은 예산안과 부속서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라. 계수조정을 포함한 심사 과정을 회의록으로 남기고 공개하라.

5.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예산안 제출 시점의 주민 공개를 의무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라. 확정 뒤 공시만 정한 제60조에 예산안 단계의 공개 의무와 표준 공개 양식을 추가해야 한다.

예산은 단체장의 돈도, 의회의 돈도 아니다. 주민이 낸 세금이고 주민의 삶에 쓰일 돈이다.

우리는 각 지역에서 예산안 공개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공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보공개청구와 공개 질의로 대응할 것이다.

2026년 11월 18일

재정주권시민행동